



2017년 주요 정책과제

2017. 1. 5.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I. 최근 금융정책 여건	1
II. 2017년 금융위원회 정책 추진방향	2
III. 주요 정책과제	3
1. 실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방안	3
2. 가계부채 관리	5
3.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	9
1) 청년·대학생 대상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	9
2) 한부모 가정 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방안	10
3)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	11
4. 기업 구조조정	13
[참고] 「2017년 금융위 업무보고」 상세 브리핑 계획	15

I. 최근 금융정책 여건

◇ [정책여건]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는 상황

- 세계경제*는 '08년 글로벌위기 이후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기조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

* 세계경제성장률(IMF, %) : ('00~'07 평균) 4.5 ('12~'15 평균) 3.4 ('16) 3.1 ('17) 3.4

- 아직까지 국내 금융시장/금융산업은 안정적*인 모습이나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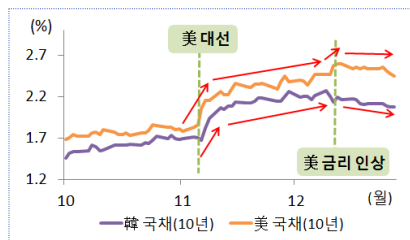
* 은행 BIS 비율(14.7%), 보험 RBC(294%), 증권 NCR(571%) 등 건전성이 아직 양호

-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등 상황에 따라 금리, 주가 등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
- 시장 금리상승 영향으로 서민·취약계층, 중소기업 등의 금융 애로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,
 - 가계부채 관리,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 등 국내 리스크요인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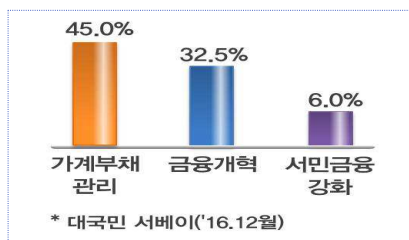
◇ [현장의 목소리] 가계부채 관리, 금융개혁, 서민금융 등 강조

- 대국민 서베이('16.12월), 분야별 민간전문가 간담회 결과,
 - 내년에는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안정이 최우선 과제이며, 일관된 금융개혁 추진과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조

시장금리 상승세 (韓·美 국채10년물)



'17년 중점추진과제(현장 목소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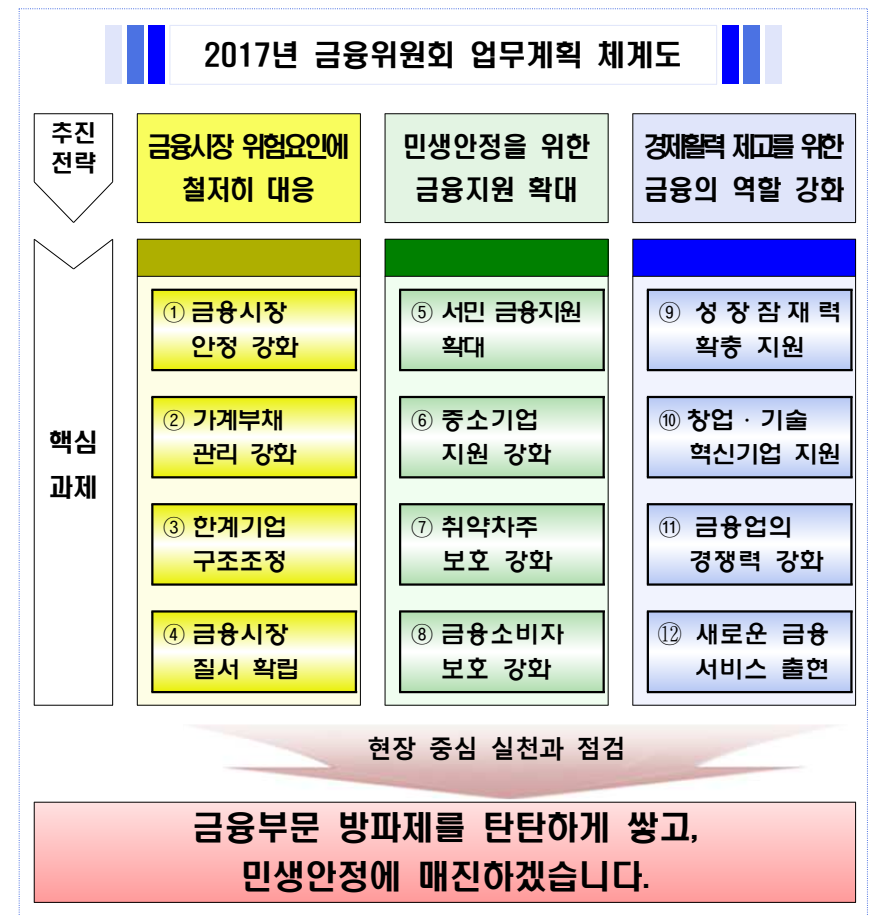


II. 2017년 금융위원회 정책 추진방향

◇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내외 정책여건, 현장의 목소리 등을 적극 반영하여 2017년에는,

- ①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(추진전략Ⅰ)하는 가운데,
- ②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(추진전략Ⅱ)하고,
- ③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역할을 강화(추진전략Ⅲ)할 계획

➔ 「3대 추진전략, 12대 핵심과제」를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



Ⅲ. 주요 정책과제

1 실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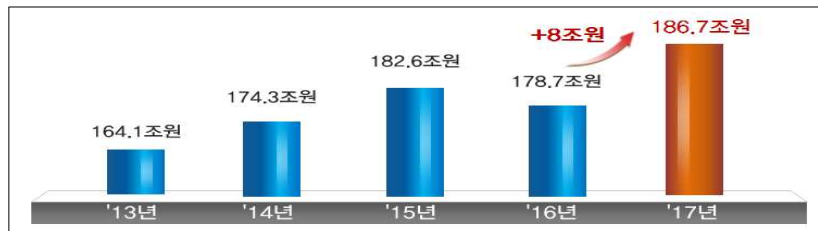
< 추진 배경 >

- '17년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가 가중될 우려
- 산·기은, 신·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자금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

< 자금공급 규모 >

- (총공급) '17년중 산은·기은, 신·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전년(178.7조원) 대비 8조원 늘어난 총 186.7조원 공급 (사상최대)
- 산은 62.5조원, 기은 58.5조원, 신보 45.7조원, 기보 20조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재원과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여 자금을 공급

<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계획 추이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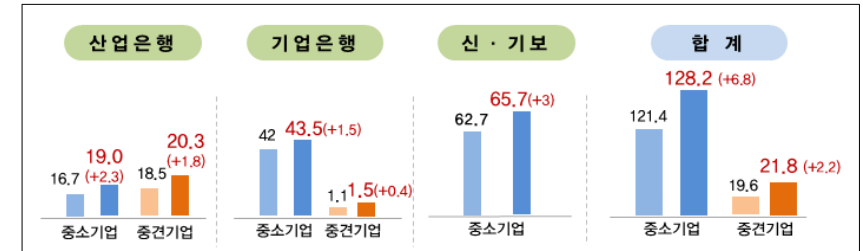
- (중소기업)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전년(121.4조원) 대비 6.8조원 증가한 128.2조원 공급
- 경제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형·수출형 중소기업 등에게 전년(23.1조원) 대비 2조원 이상 증가한 25.6조원 보증(신·기보)
- 영세 소상공인·소기업에게 전년(11조원) 대비 1조원 증가한 12조원 공급(기은)

- (중견기업) 중견기업 성장기반 확대를 위해 전년(19.6조원) 대비 2.2조원 증가한 21.8조원 공급

- 기업특성·성장단계별 차별화된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*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(산은)

* 내수중심, 해외진출수출기업, 성장중견 기업으로 구분, 성장유망기업 발굴육성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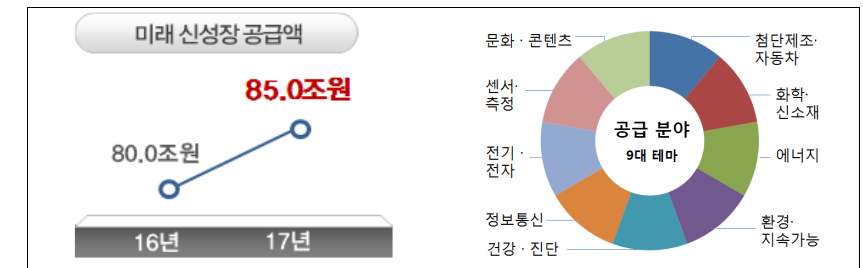
< 중소·중견기업 자금공급 계획 >



- (미래신성장) 첨단제조, 문화·콘텐츠,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 전년(80조원) 대비 5조원 증가한 85조원 공급

- 특히, 4차산업 혁명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산은의 약 20조원 신성장 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 지원해 나갈 예정

< 미래 신성장 분야 자금공급 계획 >



< 향후 계획 >

- '17.1/4분기중 정책자금 공급을 전년 대비 조기집행 예정

* 정책자금 집행률 : ('16.1/4분기) 23%, 42.7조원 → ('17.1/4분기) 25%, 46.7조원

- 정책자금 공급 실적을 분기별 점검

2 가계부채 관리 :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로드맵

< 추진 배경 >

① 정부는 그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일관되게 추진

-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요인인 가계부채는 그 규모 뿐 아니라 일시상환·변동금리 등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 왔음
 - 이는 금리 인상 등 외부충격 발생시 차주가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 등 금융시스템상의 취약요인으로 작용
- 이에 “값을 수 있는 범위에서 고정금리로 빌리고, 조금씩 나누어 갚는” 관행 정착에 주력해 왔고,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
 - *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: ('12)14.2% → ('16.9)41.4% → ('17목표)45.0%
 - 분할상환 비중 : ('12)13.9% → ('16.9)43.3% → ('17목표)55.0%

② 이제 질적 구조개선과 함께, 여신심사 방식을 보다 선진화하여 금융회사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능력을 갖추는데 정책역량을 집중

- DTI 한도규제(수도권 60%)는 획일적 비율로 적용되고 있어, 금융회사의 상환능력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
 - 특히, 차주는 규제비율(60%) 내에서는 본인의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대출받을 수 있는 “권리”가 있다고 인식
 - ※ DTI는 가계부채가 규제비율 이상 확대되는 것은 억제하였으나, 규제비율 이하에서는 금융회사 자체 상환능력심사 저해로 오히려 확대요인으로 작용
- 또한, DTI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데도 한계
 - (부채측면) 해당 주담대가 아닌 기타대출의 경우에는 원리금 전체가 아닌 이자상환 부담만 반영
 - (소득측면) 차주의 소득창출능력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측면
 - * 예) 근로소득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거나, 보유자산의 종류별로 소득창출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교한 평가모형이 부재

< 추진 방향 >

- ◇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(고정금리, 분할상환) 정착을 계기로 금융회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('17.1분기)
 - DSR을 통해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 마련
 - DTI 한도규제는 건전성 관리수단으로 유지하되, 보다 합리적인 운영방안 강구

■ (1단계) DSR은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, DTI는 산정방식 합리화('17년)

- (DSR) 참고지표로 활용하되, 금융권 자율적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, 모범사례(best practice)를 공유
 - 선진국 활용사례 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자체 여신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표준모형*을 개발(연구용역 추진)
 - * 여신심사에 DSR 반영시 고려요인, 반영 절차, 한도산정 방식 등 제시
 -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부채·소득 산정방식 정교화 작업도 병행하여 추진
 - * 예) 일시상환대출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리금 분할상환을 가정한 보조지표 산출 → 만기도래전 기간동안 상환부담이 과소평가되는 문제 해소
- (DTI) 현 규제비율 수준(60%)은 유지하되, 차주특성을 반영하여 소득 등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(“新 DTI 기준”) 마련
 - 소득산정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*, 소득 안정성 여부**, 보유자산 평가 등을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
 - * 예) 현재는 40세 미만 근로소득자만 장래소득 인정 → 非근로소득자(청년 창업자 등)의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마련(대출한도 상승)
 - ** 예) 일시적 소득이거나 변동성이 높은 경우 일정수준 감면을 적용(대출한도 하려)

■ (2단계) DSR을 활용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 개발('18년)

- (DSR)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별 자체적인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하여 시범 적용
 - * 예) 은행별 고객특성(직업, 소득, 자산, 연령, 신용도 등)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여, 내부적인 DSR 한도 등 여신심사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
- 금융회사가 DSR 정보를 차주에 제공하여 상담자료로 활용(차주 스스로 상환계획 수립)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식도 개발·확산
- (DTI) “新 DTI 기준”을 금융권별로 단계적으로 적용

⇒ DSR 여신심사모형 시범적용 및 “新DTI 기준”은 은행권부터 자율시행하고, 여타업권은 은행권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 시행

■ (3단계)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모형 정착('19년 이후)

- DSR을 금융회사 여신심사의 종합적 관리기준으로 정착
 - * 해외) Wells-Fargo 은행은 자체적 여신기준에 따라 미 감독당국에서 제시한 적정DSR기준(43%)보다 엄격한 기준(36%)을 설정
- “新 DTI” 규제는 유지하되, DSR을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간접적인 감독지표*로 활용
 - * 예) DSR이 높은 대출의 총 비중을 제한하거나, 연체시 채권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(예 : 채무조정 감면율 확대 등)하는 방안 등(개별대출에 대한 획일적 대출상한으로는 운영하지 않음)
 - * 해외) 영국에서는 고부담대출(LTI 4.5배 초과)이 전체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수준(15%) 이하로 관리할 의무 부과(portfolio limit)

< 향후 계획 >

- 학계·업계 등 논의를 거쳐 DSR을 활용한 중·장기적인 금융회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 마련('17.1분기 중)
- 선진화 로드맵에 따른 단기적 추진과제(예 : DSR 여신심사 표준모형 마련, DTI 산정방식 합리화 등)는 연내 최대한 신속히 추진

참 고

총체적 상환능력심사(DSR) 관련

1. DSR 개념

- 차주가 **모든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(주담대, 비주담대, 신용대출 등)의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**을 나타내는 지표
 - ➔ 차주의 채무부담대비 상환능력을 정확히 측정하여 “**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,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**” 선진 여신심사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반

2. DTI와 DSR 비교

- DTI와 DSR은 차주의 소득대비 부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유사하나, 산출방식·활용방안 등에서 차이
- (산출방식) DTI는 해당 대출건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부담만 반영되나,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반영
 - ※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측면에서 **DSR이 DTI보다 우월**
- (활용) DTI는 대출심사시 한도규제(수도권 60%)로 활용되고 있으나, DSR은 금융회사 내부여신관리 절차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

< DTI와 DSR 비교 >

	DTI	DSR
명 칭	• 총부채상환비율 (Debt to Income ratio)	• 총체적상환능력비율 (Debt Service Ratio)
산정방식	$\frac{\text{(해당대출 원리금상환액 + 기타대출 이자상환액)}}{\text{연간 소득}}$	$\frac{\text{(해당대출 원리금상환액 + 기타대출 원리금상환액)}}{\text{연간 소득}}$
활용방식	• 대출심사시 획일적인 규제비율(60%)로 활용	• 금융회사 여신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중

3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

1) 청년·대학생 대상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

< 추진 배경 >

- 청년·대학생이 생활자금 부족 등으로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금융 지원 확대

< 주요 내용 >

- ① (생활자금) 교육비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여, 청년·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한도 확대(예: 800만원→1,200만원)
- ② (임차보증금 대출)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생활비 절감 등을 위해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* 지원 신설(햇살론)
 - * 예) 지원한도 2,000만원 이내, 금리 4.5% 이하
 - 제2금융권 등을 이용하던 저소득가구 대학생이 임차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아 월세비용 등을 절감 가능
- ③ (상환구조 개선) 최근 경기회복 지연으로 늘어난 구직기간을 감안하여 청년·대학생 햇살론 거치기간(예: 4→6년) 및 상환기간(예: 5→7년) 연장
 - 청년·대학생이 구직하기 전에 상환부담이 발생할 가능성 경감
- ④ (취업연계) 청년·대학생 햇살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상품 성실상환자(예: 1년 이상)에 대해 취업 알선 지원('17.하)
 - * 취업컨설팅 제공, 성실상환증명서 발급, 금융권 청년취업 프로그램 연계 지원, 중소기업 취업 1년 이상 유지시 우대금리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 등

< 향후 계획 >

- '17년 상반기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청년·대학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, 하반기 시행 추진

2) 한부모가정 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방안

< 추진 배경 >

- 정책 서민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정교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

< 주요내용 >

- ① (취약계층 지원 확대) 한부모가정, 조손(祖孫)가정, 다문화가정, 새터민 등 강화된 서민금융 지원이 필요한 계층 추가 지원
 - * 현재 미소금융을 통해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지원받는 저신용(신용등급 7등급 이하) 취약계층은 장애인에 한정
 - 우대금리(3.0~4.5%) 및 한도(1,200만원) 적용이 가능한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

< 미소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 확대개편(안) >

	현행	개선(안)
지원대상	저신용 장애인	장애인, 한부모가정, 조손가정, 다문화가정, 새터민 등 저신용 취약계층
지원조건	1,200만원 / 금리 3%	1,200만원* / 금리 3.0~4.5% *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추가 지원

- ② (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) 취약 계층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대상별 추가 지원 내용을 세분화*
 - * 예시) 한부모가족(→ 학자금대출 지원 강화), 새터민(→ 임대주택보증금 지원 강화), 다문화가족(→ 불법사금융 피해시 지원 강화) 등
- ③ (취약계층 긴급자금지원 확대) 취약계층이 의료비 등 긴급 자금 수요로 고금리 대출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자금 지원 확대*
 - * 현재 성실상환시 5백만원 이내 지원 → 긴급목적 증명시 1천만원 이내 지원(미소)

< 향후 계획 >

- '17년 1분기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취약계층 맞춤형 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2분기 시행 추진

3)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

< 추진 배경 >

- 시장금리 상승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, 선제적으로 연체부담 등의 완화방안을 마련할 필요
- 그간 서민 연체차주(신용대출)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119프로그램, 성실상환자 재기지원 확대 등을 통해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

*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('16.1.28), 서민·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('16.9.26)

➡ '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저소득 서민층'에 대해서도 연체를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면서,

연체 발생시에는 주거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'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(특히, 서민층)*'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

* 주택을 보유하였으나 소득이 높지 않은 차주의 경우 향후 시장금리 추이, 주택가격 동향 등에 따라 빚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상황이 악화되어 연체될 경우 주거 안정성도 보장받지 못할 우려

< 추진 방안 : 단계별 맞춤형 대응방안 강구 >

① (채무연체 사전 예방) 연체발생 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채무 연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

- (연체이전 채무조정) 연체 발생 이전이라도 실직, 폐업 등 채무적 곤란상황 확인시 일정기간 원금 상환유예* 등 지원

* 예)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되, 서민층 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확대 검토 등

- (사전경보체계)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경보 시스템*을 구축하고, 상환유예 제도 등을 안내

* 예) 단기간에 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규모가 급증한 차주 등 선별

- (전문상담 등 제공)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전문 상담인력 운영*을 활성화하고, 긴급한 생계자금 지원**을 강화

* 예) 은행 거점점포 등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,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를 통해 신용상담 제공

** 예) 은행 등이 사잇돌대출 등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하거나,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하여 미소금융, 햇살론 등 긴급생계자금 지원

② (연체차주 보호) 서민층 주거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,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부담완화 추진

- (연체이자율 산정체계 개편) 현재 연 11~15% 수준*인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점검하고, 연구용역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비**

* 기존 정상이자(3~5%) + 연체 가산금리(연체기간에 따라 7~10%)로 산정

** 예)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(충당금 적립, 재산조사 등 사후관리비용 등) 대비 연체이자율 수준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연체이자율 합리화방안 마련

- (담보권 실행절차 개선)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이전 차주와 상담을 의무화하고, 상담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* 강화 (정책모기지 부터 시행하고, 효과를 보아가며 은행권 등 확대추진)

* 예) ① (주거안정이 중요한 차주) 서민층 등에 대해 최대 1년간 경매유예 지원
② (재산가치보호가 중요한 차주) 담보물매매중개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 등

< 향후 계획 >

- 합동T/F 논의*를 거쳐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단계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('17.1분기)

* 금융위, 금감원, 은행권, 금융연구원, 주택금융공사, 민간전문가 등 참석

4 기업 구조조정

< 추진 배경 >

- '17년에도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
 - ➔ '17년에도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기업 부문의 잠재 부실을 해소하고 기업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
- 자금차입 구조* 및 구조조정 기업의 여건 변화** 등에 따라 채권은행 중심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이 부진한 상황
 - * 시장성 차입(회사채, CP 등) 증가로 채권은행의 역할이 축소되고, 채권단간 이견, 은행들의 추가대출 기피 등으로 채권은행 주도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이 곤란
 - ** 과거와 달리 채무조정, 신규자금지원 모드를 필요로 하는 구조조정 기업 증가
- ➔ 채권은행 주도에서 자본시장 주도로 구조조정의 틀을 전환하고, 양대 구조조정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

< 추진 방향 >

- (신속한 기업구조조정) “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”이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
 - 기 확립된 조선·해운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, 他업종 잠재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시 부처 합동 대응방안 마련
 -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및 기업신용위험평가 등 상시 구조조정 체계를 통해 취약기업 선별·선제적 정상화 등 추진
 -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구조조정 이행실적을 분기별 점검(주채권은행)하고, 연 1회 이상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공개
 - 구조조정시 자산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캠프 “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”을 확대(1천→5천억원)하고 대기업도 포함

- (시장친화적 구조조정) 시장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마련
 - 객관적 신용위험평가 기준 마련 → 온정적 신용위험평가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이 지연되는 사례 방지
 -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제3의 독립적 평가기관 운영 → 구조조정채권 매각 지연 문제 해소
 - 부실기업 인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→ 민간 구조조정 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
- (Pre-Packaged Plan 활성화) 기촉법상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Pre-packaged Plan* 활성화
 - * 예)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, 법원 협의하에 채권단주도의 워크아웃 등으로 전환

< 향후 계획 >

- (신속한 기업구조조정) 조선·해운업 구조조정 지속 및 경쟁력 강화방안* 이행
 - * 한국선박회사 설립(1월), 현대상선 자본확충(2월), 선박 신조 프로그램(2월 예정)
- 여타 업종별 재무분석 및 잠재리스크 파악을 통해 필요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('17.2분기)
- (시장친화적 구조조정)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(금융연구원 주관)를 통해 의견수렴 후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발표('17.1분기)
- (Pre-Packaged Plan 활성화) 정부·법원·국책은행 TF('17.1월~)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Pre-Packaged Plan(안) 마련('17.2분기)

참 고

「2017년 금융위 업무보고」 상세 브리핑 계획

◇ 2017년 정부 업무보고 종료(1.11) 후, 「2017년 금융위 업무보고(1.5)」에 대한 주요 주제별 상세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

- ❶ 금융개혁, ❷ 가계부채 관리, ❸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, ❹ 실물경제 지원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브리핑 예정

구분 (브리핑 일시)	발표자	내용(안)
금융개혁 (1.12일, 9:30)	사무처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융개혁 성과 및 추진방향 ○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방안 ○ 핀테크 2단계 로드맵 ○ 보험업 경쟁력 강화방안 ○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○ 회계제도 개편방안
가계부채 관리 (1.13일, 9:30)	금융정책 국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계부채 관리방향 ○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로드맵 ○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○ 새로운 정책모기지 상품 출시방안 ○ 자영업자 대출 관리방안
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 (1.16일, 9:30)	중소서민 금융정책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7년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향 ○ 청년·대학생 대상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○ 한부모가정 등 대상별 맞춤형 신상품 공급 ○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관행 개선방안 ○ 사잇돌대출 확대방안 ○ 카드 소멸포인트 기부재단 활용방안
실물경제 지원 강화 (1.17일, 9:30)	금융정책 국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방안 ○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○ 새로운 구조조정 톨 마련방안

※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(1.18, 8시)